

순천 야권단일후보 뽑긴 뽑았는데...

김선동 후보 선정...무공천 선언 민주당내 엇갈린 반응

순천 야권연대연석회의는 5일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의 야권 단일 후보로 민주노동당 김선동(43) 예비 후보를 선정했다.

하지만 '순천 무공천'을 선언했지만 당무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치지 않은 민주당은 이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이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순천야권연대연석회의는 5차례의 실무회의와 4차례의 대표자회의를 거쳐 이날 민주노동당의 김선동 예비 후보와 국민참여당 김선일(47) 예비 후보 등 2명을 놓고 시민단체 10곳이 추천한 시민배심원 21명을 상대로 한 ARS(자동응답서비스) 경선을 실시,

김선동 후보를 단일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순천야권연대는 "각 후보에 대한 평가 및 지지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야권연대'에 동의하지만 무공천 방침을 밝힘에 따라 형식상 해당 후보가 없어 이번 경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의 야권연대를 위해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의 무공천을 선언했지만 당무회의의 의결 등이 이뤄지지 않아 야권 단일 후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

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해 을 보궐선거에서의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도 순천 무공천을 선언한 민주당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야권연대 참구 역할을 하고 있는 이인영 최고위원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타 야당에서 우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 단일화 작업을 진행한 상황이어서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야권 단일 후보'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이 최고위원은 "순천 무공천 방침에 대해 당무회의의 최종 의결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쪽(타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에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반면, 이날엔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시민사회단체의 중재안을 수용한 만큼, 일단 김선동 후보를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의 야권 단일후보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순천 무공천 방침에 대한 당무회의 의결과 전체적인 야권연대 연동 문제 등에 대한 당내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김해 단일화와 관계없이 순천에서는 '무(無)공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동욱·최권일기자 tuim@kwangju.co.kr



호남고속철도 교량 상판 상량식 국토해양부는 5일 오전 전북 정읍시 감곡면 유정리 현장에서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승정 구간의 원평천교 교량 상판 상량식을 했다. 교량은 상판을 공장에서 만든 뒤 대형 크레인으로 교각 위에 올림으로써 수명을 늘리고 공사기간을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제작됐다. 2009년 착공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은 19개 구간으로 나눠 동시에 공사를 시행해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오는 2014년 완공되며, 광주 승정~목포 구간 공사는 2017년까지 끝난다. /연합뉴스



김해을 野 후보 단일화 민주당·참여당 협상 결렬

4·27 김해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의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지역 차원의 협상이 결렬됐다.

5일 야 3당 경남도당에 따르면 지난 4일에 이어 이날 오후 김해에서 가진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한 모임에 민주당이 불참하고 국민참여당은 후보 단일화를 위한 방법인 국민참여 경선제를 원칙적으로 수용하지 않아 결렬됐다.

민주당은 경남도당에 후보 단일화를 논의할 위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참여당도 4일과 5일 이틀 동안 야권 후보 단일화 방법인 국민참여 경선제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됐지만 원칙적으로 이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해 을 보궐선거에서의 야권 후보 단일화는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야권 후보 단일화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버티기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 지역 민심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어 김해 을 판세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VS 2無...3강 각축 예고

화순군수 재선거 민주 후보 홍이식씨...최종후보 7명 확정

4·27 화순군수 재선거에 나설 각 정당 및 무소속 후보들이 속속 확정되는 등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5일 홍이식(52) 전 전남도위원을 화순군수 재선거 후보로 확정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4~5일 이틀간 흥전 의원과 배동기 전 화순부군수를 상대로 화순지역 전(全) 담원과 지역 유권자 700여 명을 표본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흥 전 의원이 51.24%를 얻어 48.75%를 획득한 배 전 부군수를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고 후보로 당선됐다.

민주당은 6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열고 흥 후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화순군수 재선거는 홍이식 민주당 후보와 백남수(48) 전 민노당 전남도당위원장, 최만원(45) 진

보신당 전남도당 준비위원장 등 정당 후보 3명과 임호경(59)·전형준(55) 전 군수와 민병홍(51) 전 전남도교육위원, 임호환(66) 전 한국 농어촌공사 전남본부장 등 무소속 후보 4명 등 모두 7명의 후보가 치열한 선거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역정가에서는 다른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지기반이 강한 임호경, 전형준 두 전직 군수와 민주당 후보 등이 각축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에서도 두 전직 군수의 아성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 전 군수는 10개월 전 치러진 6·2 지방선거에서 1만5283표(41.46%)를 얻은 전완준 전 군수에게 패배했지만, 1만3139표(득표율 35.64%)를 얻는 저력을 과시했다. 그만큼 고정표가 튼튼하다는 점이다. 임 전 군수 측은 그동안 철저부심하며 바닥을 다

져온 만큼 이번 재선거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자만하고 있다. 하지만, '부부군수'라는 오명은 이번 선거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군수 측의 지지기반도 만만치 않다. '형제 군수'를 지냈던 만큼 두 형제의 표가 1만 표를 충분히 웃돌 것이라고 지역정가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전 전 군수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점과 지지기반이 민주당과 중복된다는 점이 약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목포시 라-선거구 시의원 재선거 후보를 최기후 후보로 확정했다. 최 후보는 여론조사경선에서 37.64%를 얻어 32.78%와 29.56%를 각각 얻은 임형연 후보와 박준형 후보를 제치고 후보로 선출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과학벨트 공정한 선정기준 공개돼야"

강운태시장 "광주·대전·대구 분산배치 합리적"

강운태 광주시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발효와 관련해 5일 성명을 발표하고 "과학벨트는 국가 백년대계와 국민통합,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며 "광주·전남에 기초과학연구원 본원과 중이온 가속기가 유치돼야 하며, 대구와 대전에 제2, 3권퍼스를 분산 배치하는 삼각벨트 방식이 가장 과학적이며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광

주·전남은 지반의 안정성과 부지 확보의 용이성 측면에서 다른 경쟁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며 "심지어 과학벨트 경쟁지역에서는 올해 3월과 4월 진도 3과 4에 이르는 지진이 발생해 과학벨트 입지의 부적합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독일과 일본이 연구소를 분산 배치함으로써 각각 19명과 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고

있음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이어 과학벨트 입지 선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명쾌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 마련 및 공개 ▲지반의 안정성과 예산절감 측면에서 부지확보의 용이성에 가중치 부여 ▲심의과정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의견 청취 ▲정치 논리가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빠른 시일 내 입지 결정 ▲입지선정위원 지역별 안배 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광주·대전·대구 R&D 특구 경쟁한다

지경부 매년 평가 결과 따라 인센티브 차등화

광주와 대구, 대전 대덕단지 등 국내 3곳의 연구·개발(R&D) 특구에 경쟁 체제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5일 "이들 특구에 대한 지원 규정을 담은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으며,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 이르면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앞서 지난 1월 '제2차

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광주는 광(光)산업, 대구는 IT 융합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기로 하고 최근 두 특구를 출범시켰다.

개정안에는 특구 간 경쟁과 협력을 유도하고 특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특구를 평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지경부 관계

자는 "각 특구가 특화된 산업을 얼마나 육성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행·재정적인 지원을 달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특구 개발 사업 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시행자의 귀책 사유로 토지 매수 등이 지연됨으로써 계획된 기간에 개발 사업을 하지 못할 때에는 지경부가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 사업자를 제정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축 호남 4·19혁명 주역들의 한 덩어리!

호남 4·19혁명단체 총연합회 창립총회

| 일 시 | 2011. 4. 7(목) 17:30

| 장 소 | 금수장관광호텔 연회장(2F) 광주시 동구 계림동 구시청 앞

호남 4·19혁명단체 총연합회 준비위원회

사무총장 이 승 록

■ 공동대표

4·19민주혁명회 광주·전라연합지부
지부장 김 영 용

4·19혁명희생자유족회 광주·전라지부
지부장 윤 순 덕

4·19혁명공로사회 광주·전라지부
지부장 오 치 갑

4·19문화원
이사장 전 태 갑

광주 4·19혁명기념사업회
회 장 이 병 열

광주 4·19혁명동지회
회 장 최 영 길

광주 4·19민주포럼
이사장 오 은 열